

‘패스트트랙’ 일주일 만에 고개 드는 ‘의원수 확대론’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석으로 유지하되 비례대표를 늘리는 방식의 선거제도 개혁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지 일주일 만에 여야 4당 내부에서 의원정수 확대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의원정수 확대 주장의 포문은 호남을 기반으로 둔 민주평화당의 박지원 의원(전남 목포)이 열었다.

박 의원은 지난 7일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비례대표가 늘어 지역구가 줄어들

박지원 “300석 적어…국민도 이제 많이 이해”
한국 “의원정수 늘리려는 꼼수…대국민 사기”

면 현재 농어촌 지역구는 형편없이 더 축소될 수밖에 없다”며 의원정수 확대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에 올린 선거제 개혁안은 전체 의석수를 300석으로 고정하되 현행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을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으로 바꾸는 것이 골자다. 이 경우 지역구는 28석 줄게 된다.

박 의원은 “수도권 또는 대도시 중심으로 의석이 배분된다고 하면 농어촌의 피해는 불 보듯 뻔하다”며 “우리나라의 특수한 사정을 봐서 농어촌 지역 (의석)은 보강시켜주는

게 좋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처음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논의 때도 여야가 약 30석 내지 60석 증원을 검토 할 때(라고 이야기했다)”라며 “인구 5000만 명에 비해 (국회의원) 300석은 적다”고 주장했다.

의원정수 확대는 앞서 선거제 개혁 논의 과정에서 비례대표당과 평화당, 정의당 등 3당이 주장해온 것이다. 지난해 12월 15일 여야 5당의 선거제 개혁 합의안에도 의원정수와 관련, 10% 이내 확대 여부 등

고 있는 한국당은 ‘의원정수 확대론’이 고개를 들자 공세 수위를 한층 높이고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박 의원도 그렇고 모두 의원정수 300석은 적다면서 의석수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결국 밥그릇 늘리기를 반영하자는 건데 한국당은 범여권 4당에 모든 것을 원천무효로 하고 처음부터 다시 논의를 시작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윤상현 의원도 “동물국회라는 비난을 받아가며 패스트트랙에 태운 선거제 개편안은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려는 꼼수에서 시작된 대국민 시기국”이라며 “자신에게 유리한 지역구 의석이 많이 줄게 된 것을 뒤늦게 알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3당 일각의 의원정수 확대 주장과 한국당의 공세에 선을 긋는 분위기다.

정개특위 여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8일 뉴스와 통화에서 “우리당은 현재 정원에서 최대한 개혁 방안을 찾자는 게 기본 방침”이라며 “특히 의원정수 확대는 여야 5당 합의는 물론 국민의 동의가 전제돼야 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김해영 최고위원은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의원정수 확대 주장은 미치 학생이 가지고 있는 문제집도 풀지 않으면서 친구가 갖고 있는 다른 문제집이 좋아 보인다고 엄마에게 사달라고 조르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포함 검토’가 명시됐다.

이에 3당은 의원정수를 현행보다 10% 늘린 330석으로 확대하고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의석을 배분하는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제안했지만 여론 반발에 부딪혀 반영되지 못했다.

그러다 한국당이 의원정수를 10% 줄이는 대신 비례대표를 없애자고 주장하면서 3당은 더불어민주당과 논의를 거쳐 의원정수를 300석으로 유지하는 합의안을 도출했다. 그런데 의원정수 확대 주장이 다시 나온 것이다.

패스트트랙 지정에 강력 반발하

긴장 흐르는 바른미래당 의원총회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의원총회에서 손학규 대표 등 지도부 측과 유승민 의원 등 바른정당계 의원들 사이에 긴장이 흐르고 있다.



임기 마치는 홍영표 “한국당, 민생투쟁? 정확히는 대권투쟁”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선거제·개혁입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반발해 잠외부총에 돌입한 자유한국당을 향해 “민생투쟁을 하겠다고 하는데 정확한 표현은 대권투쟁”이라고 비판했다.

이날로 임기 1년을 마무리하는 홍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황교안 대표가 대권에 대한 욕심 때문에 국회를 파행시키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다면 국회를 이렇게 장시간 파탄 낼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회 상황이 어려워져서 후임 원내대표와 국민에게 굉장히 죄송한 마음”이라며 “작년에도 국회가 장기간 중단돼 있는 상태에서 국회 정상화가 첫 과제였는데, 이번에 또 그런 상황이 돼 국민에게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원내대표를 하면서 의회 민주주의 정신은 대화와 타협이라고 생각했다”며 “여야 간 정치적 입장과 이해관계가 다르기에 쟁을 수는 있지만 항상 일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고 생각을 가졌는데 몇 달 동안 어떤 진전도 없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도 “국회는 국민과 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이해찬 대표가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나는 홍영표 원내대표에게 꽃다발을 건네고 있다.

한민국을 위해 일해야 한다. 민생하게 만들고 앞장 서서 국민을 위하고 경제를 살리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일하는 모습을 국민은 평가해

“황교안, 대권 욕심에 국회 파행시키고 있어”

“민생 살리고 한반도 평화 만들 책임 민주당에”

만들어나갈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며 “이해찬 대표를 비롯해 당지도부가 지금처럼 당을 일치단결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윤호 서울취재본부장

한국당 “문다혜 해외 이주 의혹, 검찰 철저 수사하라”

“감사 이뤄진다 하고 돌아온 것은 정치보복”

지유한국당이 문재인 대통령 딸 문다혜 씨의 해외이주에 대해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며 공세에 나섰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8일 열린 ‘문다혜 해외이주 의혹 진상 조사TF 회의’에 참석해 “현직 대통령 자녀가 일기 중 유학도 아니고 해외 이주한 드문 사건이 발생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데 청와대는 숨기려고만 한다”며 “한국당이 이미 고발장 낸 부분에 대해 감사가 되고 있으나 미흡한 부분이 있어 검찰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이 문제는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문제도 있기에 당연히 국회 내용을 파악하고 국민도 알아야 한다”며 “그간 과상도 한국당 의원이 의혹을 제기해왔고 감사원 감사청구도 했다. 노영민 비서실장도 감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답

변했는데, 결과적으로 돌아온 것은 과 의원에 대한 정치 보복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숨는 자가 범인이고 숨기는 자가 범인이라고 한 적 있다. 더 이상 숨기지 말고 진실만 밝혀줄 것을 요구한다”며 “한국당은 이 부분을 지속해서 진실 밝혀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한 곽상도 한국당 의원은 “해외이주 관련 감사원에서 공익 감사 실시 여부와 관련한 법률 검토를 로펌에 의뢰했다는 재보를 빙자”며 “감사를 안하려는 명분을 찾으려는 게 아닌가 강한 의심이 된다. 감사원의 적극 감사를 촉구한

다”고 밝혔다.

또 “노 비서실장의 이야기를 보면 청와대 경호 비용이 일정 부분 있는 것으로 안다고 한다”며 “이미 경호 비용을 파악하면서 국민에게는 일리지 않는다. 소통하겠다는 문재인 정부가 이런 식으로 회피하는 게 운동한 처사인가”라고 따졌다.

TF팀장을 맡은 이종래 의원 또한 “자료 접근이 어렵다. 자료를 일정 부분만 공개해도 되는 부분만 쥐어서 파고들기 어려워 진상규명이 어렵다. 미치 숨비꼭질하는 것 같다”며 “TF를 운영하며 상당히 감주하고 싶은 부분이라고 느껴지고, 피해자려니 정치보복 이어지는 게 아닌가 싶다”고 했다.

김윤호 서울취재본부장

지역공감·미래창조·정론작품 전화 062)224-5800
湖 南 新 聞 팩스 062)222-5548

야호센터는
인문·예술·사회참여로
청소년·지역주민과 함께합니다.

야호는 청소년의 외침이다.

Drawing 이호동

062-960-6980
광산구 사업로 340번길 5

Together Gwangsan

야호의 꿈

청소년이 지금 행복한 삶
청소년이 사유하는 삶
청소년이 예술을 향유하는 삶
청소년이 마을을 사랑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세계시민이 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삶을 위한 공부를 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더불어 살아가는 삶

Drawing 이호동

광산구